



보도 일시	2022. 7. 7.(목) 시간(별도공지)	배포 일시	2022. 7. 6.(수) 10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	책임자	과 장 김위정 (044-215-5720)
		담당자	사무관 김영웅 (ssuper84@korea.kr) 사무관 신채용 (shinchy@korea.kr)

「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」 개최

□ 정부는 7.7일(목) 국무위원, 여당 주요인사,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「2022 국가재정전략회의*」를 개최함

*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서,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9월초 '23년 예산안과 「'22~'26 국가재정운용계획」을 확정·발표

- 금년 국가재정전략회의는 「바로 서는 나라재정! 도약하는 대한민국!」을 주제로 새정부 국정과제 뒷받침, 재정총량 관리목표,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과제 등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
- 새정부 재정전략에 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제, 주요 분야별 재정 이슈에 대한 국무위원·민간전문가 발제·토론을 통해 재정정책 방향 모색

※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주요내용은 첨부자료와 같음

□ 한편, 금번 회의는 참석자, 개최장소 등 기존 재정전략회의와 차별화

① 국무위원 중심의 전략회의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업인,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발제·토론 참여

* 주요 민간참석자 : 권오현(삼성전자 고문), 곽노정(SK하이닉스 대표), 이수만(SM 총괄 프로듀서), 하정우(네이버시랩 연구소장) 등

② 재정전략회의 최초로 지방국립대학교에서 개최, 지방대학생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MZ세대들의 애로사항 경청

* 총 18회 개최 : 청와대(11회), 중앙공무원 교육원(6회), 세종컨벤션센터(1회)

③ 비공개 내부 토론이 아닌 전략회의 주요 논의내용을 브리핑 등을 통해 최대한 공개하는 투명한 회의로 추진

바로 서는 나라재정!
도약하는 대한민국!

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

2022. 7.

순서

I.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 1

II.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 및 효율화 방안 ... 5

I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

1. 우리 재정의 現 주소

□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로 나라빚 급증

-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(+416조원), '22년 국가채무는 1,100조원 수준
- 코로나 위기 대응 및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매년 100조원 내외 재정적자 고착화 추세

국가채무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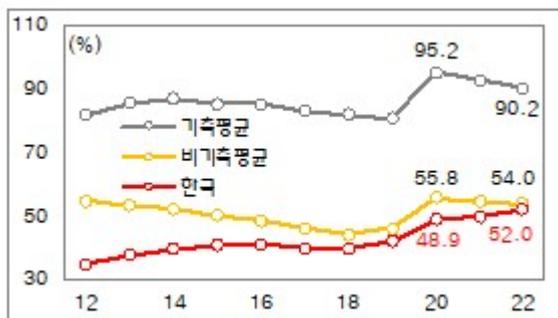
관리재정수지 추이



□ 주요국 대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

- 선진국과 비교 시 우리의 부채비율은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임박
- * '20→'22 정부부채(GDP%, IMF) : (韓)48.9→**52.0** (비기축)55.8→**54.0**
- 최근 국제기구·신평사의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도 변화

선진국보다 채무가 빠르게 증가(IMF)



* 출처 : IMF('22.4월)

국제신평사·국제기구의 우려

Fitch (22.1월)	"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기조 유지시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"
Moody's (21.5월)	"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 가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 을 시험"
IMF (21.4월)	" 부채부담이 폭발 하지 않도록 향후 재정정책은 좀더 장기적 관점 으로 접근"

* 출처 : Fitch, Moody's, IMF

2. 새정부 재정운용방향

- ◇ (목표) 민간주도의 한국경제 재도약 뒷받침 +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
- ◇ (4대정책방향) ①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②건전재정 기초 확립
③강력한 재정혁신 ④재정비전 2050 수립·추진

① [국정과제 뒷받침] 국정과제 소요(209조원) 신속 지원 추진

-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'23년 예산안 및 '22~'26년 중기 투자계획(9월초 국회 제출)에 국정과제 재정소요 반영
- 강력한 지출효율화 및 세입확충 등을 통해 국정과제 소요 재원조달

② [건전재정 기초] 재정적자 $\Delta 3.0\%$ 이내 + 국가채무 50%대 중반 관리

- ① (재정수지) '22년 GDP대비 $\Delta 5\%$ 수준*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$\Delta 3.0\%$ * 이내로 대폭 개선

* 코로나 이전 재정수지('19년 $\Delta 2.8\%$) 및 주요 선진국 재정건전성 관리기준($\Delta 3\%$) 고려

* 관리재정수지(GDP대비%) : ('19) $\Delta 2.8$ ('20) $\Delta 5.8$ ('21) $\Delta 4.4$ ('22^{1차추경}) $\Delta 5.2$

- ② (국가채무) '27년 국가채무비율 50%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하여 국가채무 증가속도 안정화 추진

* 역대 정부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 +5~6%p

-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(+14.1%p)의 1/3 수준

* 국가채무비율(GDP대비%) : ('17) 36.0 → ('22^{1차추경}) 50.1 → ('27) 50% 중반

③ [강력한 재정혁신]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효율화

- ① (재정준칙 법제화) '20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·반영하여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개편 추진

- (단순성) 복잡한 곱셈식 방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수치·채무준칙 기준 설정

- (엄격성) 통합재정수지 보다 엄격*하고 그간 재정건전화 관리 지표로 일관되게 활용해온 관리재정수지**를 활용

* 통합/관리수지(GDP%) : ('20^{결산})△3.7/△5.8 ('21^{결산})△1.5/△4.4 ('22^{1차추경})△3.3/△5.2

** 관리재정수지 = 통합재정수지 - 사회보장성기금 수지(국민·사학·산재·고보기금)

- (구속력)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높은 수준의 구속력 확보

※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준칙(안)은 9월초 발표 예정

※ **기존안과 새 정부 준칙안 비교**

	기존 정부안	개정안
① 관리지표	통합수지+국가채무	관리수지(국가채무)
② 한도식	$\left(\frac{\text{국가채무}}{60\%}\right) \times \left(\frac{\text{통합수지}}{\Delta 3\%}\right) \leq 1.0$	관리수지 $\Delta 3\%$ 이하 → (채무 60% 초과시 수지한도 축소)
③ 법적근거	시행령	법률
④ 적용시기	'25년까지 유예	법 개정후 바로 적용

-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재정준칙을 감안하여 '23년 예산편성

② (교육교부금 개편)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편

-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* 등을 활용하여 「(가칭)고등·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」를 신설**, 미래 인재육성***에 투자

* 유특회계 전출금 제외, '22년 본예산 3.6조원

**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,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

*** ①대학 교육·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, ②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

③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, ④지방대학 육성 등

-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 지속 추진

※ **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요**

○ (재원) 내국세의 20.79% + 교육세 일부(유특회계 전출 제외)

○ (용도) 교육청이 유·초·중등 교육에 활용

※ **개편필요성**

○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 약 4배 증가*, 학령인구**는 34% 감소

* 학령인구(6~17세,만명) : ('00)811 → ('10)735 → ('20)548 → ('22) 539

** 교육교부금(조원) : ('00)14.9 → ('10)32.3 → ('20)53.5 → ('21)59.6 → ('22)65.1

○ 유·초·중등교육 분야와 고등·평생교육 분야간 투자 불균형

*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('18, 한국/OECD) : 초·중등교육 132%, 고등교육 66%

③ (성역없는 지출구조조정)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,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

- 그간 유사·중복,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 원점 재검토

- 민간 보조사업 점검* 결과 사업 축소·폐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'23년 예산안에서 지출구조조정 추진

* '22년 총 1,205개 사업 중 440개 사업 점검('22.5월) → 폐지 61개, 감축 191개

④ (공직사회 고통분담) '23년 예산안 편성시 민생경제 어려움 등 감안하여 출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·보수 관리 추진

⑤ (재정 외 가용재원 총동원) 민간투자 활성화,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정 외 가용재원 총동원하여 재정부담 절감

- (공공기관)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*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

* ①컨벤션 시설·홍보관, 유희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 낮은 자산,

②골프장·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

- (민간투자사업) 대상시설 다양화¹⁾, 참여유인 제고²⁾, 민자 관리 체계 혁신³⁾ 등을 통해 민간투자 규모 확대(연평균 5→7조원+a)

1) 도로·철도 중심 → 교통·생활인프라 확충, 노후시설 개량 등

2) 사업방식 다변화, 수익 패러다임 전환, 절차·비용부담 완화 등

3) 재정·민자사업간 연계 강화, 민자 사업대상 사전확정, 주무관청 전문성 제고 등

- (국유재산) 유희·미활용 국유재산 매각 등 재원확충 노력과 함께,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및 창업시설* 지원 등 추진

* 폐 공공청사 →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대부 / 유희 공공청사 복합개발 → 청년 창업공간 조성

⑥ (민간역량을 활용)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재정투자로 전환

- (정책금융)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

- 특히, 직접 용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, 지출규모는 줄이고 수혜 규모는 유지·확대

* (예)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이차보전 방식 전환

- (R&D) **先민간투자-後정부지원** 방식의 TIPS 프로그램*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, 융합·협업 연구확대 등 성과제고 노력
- *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
- 민간 VC 등이 유망 창업기업 발굴先투자 → 정부가 기술개발사업화 자금 등 지원

4 [재정비전 2050] 중장기 시계에서 과감한 개혁과제 발굴·추진

- ① (2050년 타게팅) 2050년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 문제해결*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목표로 「재정비전 2050」 수립 추진
* (예) 탄소중립, 세계 최고령 국가 진입,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100% 육박 등
- ② (10년 내 추진과제 중점)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심화, 인구감소 등 앞으로 10년이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인 과제*들을 중점 발굴
* (예) 인구변화를 고려한 재정지원 체계 개편, 기업지원 정책전환 등
- ③ (금년 말까지 수립) 민관합동으로 민간의 시각을 접목해서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 수립

II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 및 효율화 방안 ※부처 발제 주요내용

1 국가 R&D 투자 효율화

◇ 기술주권 확보 및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해 선택과 집중, 전략적 **민·관 협업으로 R&D 투자 효율화**

① 초격차 전략기술에 선택과 집중

- 경제·외교·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 지정·집중 육성, 기업-대학-연구소 역량 결집을 통해 기술 스케일업 지원 및 인력 양성
- 민관합동 로드맵 수립, <가칭>민관합동 전략기술위원회 구성 및 「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」 제정

② '민간 주도, 정부 지원' 방식으로 구조 고도화

- 상시적인 민관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R&D 기획→투자→평가 과정에서 산업계 참여 확대
- 민간이 제안·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(<가칭>초격차 R&D 프로젝트) 추진

③ R&D 시스템 혁신으로 투자의 효과성, 전략성 제고

- 출연 중심에서 경쟁형, 바우처, 후불형 등 민간투자 연계 지원 확대 등 기업 R&D 지원방식 개편
- 통합 R&D 성과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범부처 성과정보 연계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

② 중소·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방향

◇ 정부주도의 '소액 나눠주기식 양적지원 정책'에서 벗어나 '민간·시장 중심의 재정전략'으로 전환

① 시장기능의 회복과 정상화

- 정부 주도의 보호에서 시장의 수요에 대응한 현장 적시 지원 방향으로 정책자금 리포지셔닝, 성과창출형 R&D 도입·확대
- * 원전 생태계 복원 및 반도체 등 초격차 분야 정책금융·펀드 지원, 투자형 R&D 등

② 민·관의 유연한 소통과 신속한 피드백 / 민간의 선별 기능 활용 확대

- 중앙정부-지자체-민간과의 상시 소통을 통한 협업 정책 수립
- * 대기업-스타트업협업플랫폼, 규제자유특구, 디지털플랫폼 등을 통한 실시간 정책 소통 등
-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의 민간주도 재정지원 방식을 강화·확대하고, 모태펀드의 시장성 확대

③ 기업 활력을 위한 규제개선 / 시장 지향의 디지털 전환 추진

- 공정거래, 중소벤처 氣 살리기, 근로상황 분야 관련 민간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에 노력
- 정부 주도로 보급 목표 물량을 채우는 방식에서 기업·시장 중심의 디지털 전환 생태계 구축
- * 스마트공장, 스마트상점, 소상공인·자영업자 상권정보 시스템 등

③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방안

◇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**대학 핵심규제 혁파,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, 대학 자구노력 지원** 등 추진

① 대학규제 개선

- 첨단분야 신·증설을 위한 정원기준 완화, 학과·전공 간 칸막이 해소하는 학사구조 유연화, 경직적 교원 자격기준 완화

② 안정적 재정지원

-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안정적 확대·효율화를 기반으로, 대학의 자율혁신과 산업·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뒷받침

③ 대학 자구노력 지원

- 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화 허용 등 대학 재산을 활용한 재정 여건 개선, 창의적 자산의 기술이전 등 수익창출 경로 확장

④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

◇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,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, 신산업 육성 지원 등 **시장·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극대화**

① 일자리사업 구조조정

-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로 일자리사업 효율화
 - (폐지) 지자체 사업과 유사·중복, 코로나 한시사업 등 11개
 - * <지방이양> 경찰청 아동지킴이 <폐지>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
 - (감액 및 제도개선)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
 - * 등급부여 전체 169개 중 32개(19%), 직접일자리 43개 중 13개(30%)

② 디지털·신기술 분야 등 인력양성 확대

- 민간기관 등 다양한 훈련주체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인력 양성, 대기업 훈련 인프라 활용* 중소기업 훈련 활성화
 - *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훈련시설, 장비개선 등 지원 강화
- '신기술 인력수급전망' 분야·수준별 고도화를 통해 전략적 인력양성 뒷받침

⑤ 복지투자 혁신 및 지출 효율화를 통한 복지-성장 선순환 전략

◇ 복지수요 증가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여력 축소와 新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응하여 전략적 복지지출을 통한 복지-성장 선순환 강화

① 복지투자 혁신

- 혁신적 민간 기관 참여, 보편적 생활형 서비스* 개발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예방적·지역밀착형 복지투자** 강화

* 맞벌이 수요 대응을 위한 가사 서비스, 위급 상황 시 병원 동행 서비스, 심리 상담 등

** 노인 대상 지역내 의료-요양-돌봄 통합적 제공,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

② 성장 친화적 복지 전략

- 양육 환경 개선 및 저출산 투자를 강화하고 청년 및 근로 연령층에 대한 소득·주거·고용·교육·건강 지원 강화

③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

- 생계급여·긴급복지 강화 등 저소득층의 위기시 안전망 강화하고, 맞춤형 돌봄지원 등 장애인 수요에 맞게 통합 지원

④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대응

- 고독사, 가족돌봄청년 등 新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, 디지털 기술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적 서비스 안내*도 적극 추진

* '복지멤버십'을 통한 국민 확대로 생애 주기별 급여 안내(22.9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)

⑤ 지출구조 개혁

- 사회보장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*, 사회적 합의 유도를 통한 연금 개혁 및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등 사회보험 개혁

* 사회보장제도 전수 DB + 사회보장 데이터(국민 20% 표본) 구축, 복지사업 협의제도 내실화 등